

# 굴뚝오염 자동측정센서 설치 의무화... '조작 가능성' 논란

환경부, 내년까지 538곳 의무설치  
“TMS 데이터 조작 대책 반영안돼  
대책은 관리·처벌강화 내용일 뿐  
제조사서 상수값 의무 오픈해야”  
환경부 “2014년 이후 조작 없어  
2회 적발시 사업장 폐쇄 등 처벌”

제철소 등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정부 관제센터로 보내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의무 설치되지만, 배출 농도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고 장비 고장 시 개선기간도 너무 길어 이 기간 중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전국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1,2,3종

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1,2종 굴뚝은 올해 7월까지, 3종은 내년 연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TMS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최대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총량관리대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온라인 전송해 사업장의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632개 사업장 1745개 굴뚝에 설치됐고, 의무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 연말까지 전국 538개 사업장의 2292개 굴뚝이 설치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들의 비용은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치를

여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 환경부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TMS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후 나온 환경부 대책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 뿐. 기술적으로 배출농도 조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한 바 있어 한 장관의 이에 대한 해명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배출량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TMS 측정기 테스트 방식을 스펀(Span)값으로 하는데, 이를 실제 배출구 농도를 반영한 중간값으로 테스트하면 근본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TMS 모니터링 시 환경부가 인허가 해준 오염물질 농도의 최하인 제로값(0ppm)과 동작범위 최대치인 스펀값을 측정하는데, 사업장마다 배출농도가 다르고 상수값을 바꿔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 하지만 TMS 원격 모니터링 시 표준 가스를 해당 사업장의 평상시 배출농도 값으로 원격 테스트하면 조작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TMS 장비의 변경되는 모든 상수값의 변경을 관제센터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TMS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상수값을 오픈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TMS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TMS 설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고 있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할 경우 이 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을 초과해 배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배출량 규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환경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 2018년 공청회 등을 열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침을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배출농도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공단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간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2014년 이후 실제 조작 사례는 없다”며 “내부검토 결과 비밀번호 유출에 대비해 2019년 국정감사 직후 관제센터 점검시 들어간 사람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출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9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엔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 라임펀드 투자손실 최대 78% 배상 권고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 알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이다.

일단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을 50~55%로 잡았고, 여기에 투자자별로 사유에 따라 가감해 정해졌다. 최고 배상비율은 78%로 원금 보장형 상품을 원했던 80대 초고령자에게는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설명

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번에 분조위에 부의된 것은 모두 3건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6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설명하지 않은 사례는 65% 배상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청년구직자 10명 중 6명 '사실상 구직포기'

대한상의, 일자리 상황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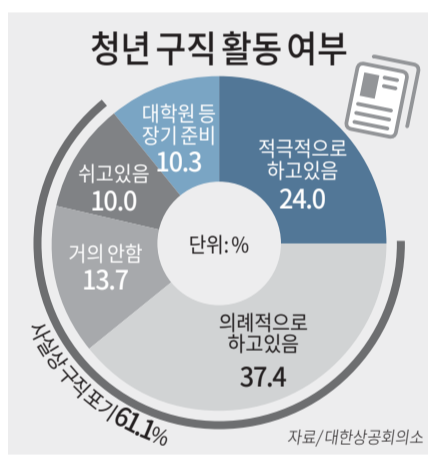
‘적극적 구직활동한다’ 24% 불과  
의례적 37%, 안하거나 싨다 24%  
57% “올 취업 어려울 것” 답변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취업난도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들은 평균 9.3개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최근 1년간 8.4번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면접도 2회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24%에 불과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도 37.4%에 머물렀다. ‘거의 안하거나 그냥 쉬고 있다’는 23.7%나 됐다.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것.

희망도 없었다. ‘올해 내 취업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1%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41.3%였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자신감마저 위축되어 자칫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청년들은 고용시장 문제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64.1%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고 답했고, 자동화나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답변은 25.8%였다.

다만 청년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포괄적이라고 봤다. 가장 많은 47.4%가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꼽았

고, 26.1%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청년층 기회감소’, 13.4%가 ‘대학 졸업자 과다’를 지적했다.

고용시장 회복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금년 중이라는 응답은 3.6%, 2년 이상이 73.6%나 됐다. 이중 2~3년이 42.3%로 많았지만,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31.3%였다.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 우려’가 49.2%로 압도적, ‘고용시장 경직으로 기업들의 채용 기피’가 21%,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16.1%였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부정적이었다. 77.8%가 신청도 해보지 않았고, 참여한 경우는 6.4%였다. 15.8%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유는 ‘경력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다. 30.6%가 이렇게 말했다. ‘정보를 찾기 어려워’라는 대답도 27.5%, ‘취업에 집중하려고’라는 청년은 26.9%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35.9%가 ‘경기 활성화’, 18.2%가 ‘노동시장 개혁’, 11.9%가 ‘기업투자 촉진’을 말했다.

/김재용 기자 iuk@

## “감염의심·고열 땀 집중 연기해야”

>> 1면 ‘AZ백신 첫 출하...’서 계속

이 백신 약 5만8000명분은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5만49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설명회에서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라고 판단해 접종이 가능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건 맞지만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전 의사와의 철저한 예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elle@